



2018년 제1차 평생교육협의회

2018. 2. 20.(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

○ 간사 :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을 맡은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장 직무를 대행해주실 ○○○님이십니다.

(일 동 박 수)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이신 시장님과 부의장이신 부교육감님은 내부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총 18분으로 구성되고 이번에 9분이 연임하시고 3분이 신규 위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위촉장을 드리지 못한 관계로 위촉장을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촉되신 위원님들께 전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18분 중 10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평생교육협의회가 2009년도에 처음 생겨서 이제 4기를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연임을 희망해주셨고 오늘 3분을 모시게 되어서 총18분으로 구성됐는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평생교육협의회가 서울시에서 하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각종 사안에 대해서 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자문, 심의 그다음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교육진흥에 관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자문을 해주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협의회 구성이 완료됐고 4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롭게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 그리고 전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작년6월에 아마 2022 서울자유시민대학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보고 드리고 또, 여러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정책에 반영해나가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데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시고 또, 소중한 의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에 따라서 소관과장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오늘 논의하실 안건인 2018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안) 및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설명 자료같은-
- 의장(평생교육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조례상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6월에 하고 그때 논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그때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풀뿌리 평생학습 기관 단체들과의 역할관계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 아까 얼핏 과장님께서도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런 내용 포함해서 종합적인 2022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좀 더 다듬어야 되기는 한데 전체적인 방향은 이 정도 틀에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모두에 얘기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이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재단의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됐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시민대학장이 인선 중에 있고 그분이 선임이 되면 저희가 3월말 중에 오픈을 하고 본격적으로 본부 캠퍼스 중심으로 나머지 분교들을 총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대학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분을 모셔야 될 것이고, 총17분이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데 인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뽑고 있는데 모든 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하드웨어가 갖춰졌지만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본부하고 시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금년도에 첫 시작한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출발하기 전에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전을 오늘 보고했는데 하나는 금년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안)하고 두 번째는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안전에 관계없이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1쪽에 보시면 어르신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도 불리는 것이 다르고 중장년층 하면 44세대 등 요즘 새로운 말을 만들려고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연령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65세가 노인이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어르신을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의로 사용하시는지?

- ○○○ 위원 : 일본도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한다고 나오잖아요.
- ○○○ 위원 : 여기 '어르신'을 사용할 때 연구진에서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 간사 : 지금 사회통념상 65세 어르신을 지금 현재는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 ○○○ 위원 : 지하철 무료 타는 것도 65세 이상입니다.
- ○○○ 위원 : 여성회에서도 조금 갈리잖아요.
- ○○○ 위원 : 어르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노년 전기, 중기, 후기로 해서 노년에 어머니와 딸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60세 딸과 90세 어머니가 있는데 최근에 고용부가 55세에서 64세를 장년층으로 정의해서 장년층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 중입니다. 기존에 고령자 기본계획 대신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항상 얘기했지만 55, 64세에 대한 정책이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정책 하면 40대까지가 주 대상이 되고 고령자정책 하면 복지부에서 65세로 해서 50대에서 정책이 부재한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서 노년기에 진입하는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전환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서울시는 인생2모작이라고 하는데 마련하지 못하면 노년기에 사회참여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그 연령대를 장년층으로 그러니까 노년 전기라고도 하지 않고 정의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인문교양 쪽의 평생교육이 너무 약해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강화하고 이런 측면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산층 타겟의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베이비부머 장년층, 노년층, 여성 이런 쪽에 대한 정책부분은 여기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그냥 말씀 드릴 테니까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서 칸막이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 업무분장 때문에 나누다

보면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교육에서는 학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것인가, 보통교육인지 아니면 평생교육에서 맡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보통교육에서 할 수가 없다면 평생교육이 맡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 의장(평생교육국장) : 학교밖청소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있고 정기교육 말고 그래서 정기교육에서 부적응하거나 중도에 탈락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서울만 1년에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 ○○○ 위원 : 어쨌든 답은 직접 안하셔도 괜찮은데 참고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 선생님이 말씀하신 은퇴에 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방광역단체에서는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농촌인구가 평균연령이 75세라고 합니다. 10년만 지나면 농촌인구는 자연히 소멸이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농촌에서는 어떻게 고민하느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농지를 위탁을 받아서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40대, 50대 되면 은퇴이후를 고민할 텐데 이 양반들이 은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는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서울시민이지만 서울시민이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평생교육 쪽에서는 이런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면 만약에 현장 실습이라든지 답사가 필요하다면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역단체에서는 오시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인문사회 교육 중심으로 갔다가 이제는 시대적 과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잘하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귀농귀촌 프로그램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도시농업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대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에 서울농장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폐교를 사서 그쪽을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체험장이라든지 작농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을 서울농장으로 명명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월 달에 만났더니 충남에서 학교학생들이 필요하면 서울에서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가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 양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1년이나 3년 정도 농촌 생활을 해가면서 내려오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는 경우 40대 같은 경우는 학년기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학교 프로그램하고 기반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면 활용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 ○○○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은퇴자들에 대해서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에 50플러스 재단이라고 별도로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한 범주인데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인문, 교양교육, 사회생태, 경제교육까지 해서 서울에서 조금 분리가 되어 있지요.
- 의장(평생교육국장) : 학교밖청소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전체학생의 1% 정도가 학교밖청소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 초·중·고 해서 9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1년에 1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그 중의 절반이상은 유학을 가는 경우, 순수하게 적응을 못해서 오는 경우가 30~40%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부적응해서 나온 아이들 특히 고1시기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타겟으로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 해서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시작한 것이 몇 개 있는데 정말 집안에 돈이 있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 저희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하고, 정말 가정이 어려워서 물론 학교에도 적응을 못하지만 정말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그 사이에 자기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다녀야겠다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시키자 해서 새롭게 한 것이 첫 번째는 인턴쉽이라고 그 아이들이 직장에 다닐 때 남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턴쉽으로 해서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학교는 못 다니는데 검정고시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검정고시 비용이 연간 따져보니까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150명 정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 세 번째는 공교육은 못 다니지만 대안교육을 다니고 싶다, 대안교육도 기관에 따라서 수업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몇 십만 원이지만 어떤 데는 1천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연평균 따져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금년에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 문제는 학교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사실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이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석구석까지 잘 챙겨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포인트를 어차피 이것을 다 알리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핵심을 뭘 했을 때 평생교육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층별로 다를 것입니다. 주부계층, 은퇴자 계층, 학생계층 또,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든가 챙겨야 될 부분이 사실은 외국에서 한국의 유학생으로 14만 정도가 와있는데 한류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왔다가 떠날 때는 65% 이상이 반한감정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아세안이라든가 글로벌 서울을 지향하면서 이런 것 하나도 못 챙기면서 다문화 얘기를 하기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딱 보면 느끼는 것이 외국어강좌를 특정학
원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데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
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중국에서 온 학생이 중국어를 가르치고 베트
남에서 온 학생이 베트남어를 가르치면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어도
가르치는 위치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막하기보다는 뭔가 레벨을
up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
한 좋은 이미지와 민간쪽 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언어뿐만 아니
라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섞이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
이 듭니다.

두 번째는 소외계층 이런 교육은 있는데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화가 안됩니다.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요. 그래서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코딩교육을 특화시켰으면 좋겠다, 이
게 사실은 미래의 직업과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여기에서
영재가 발굴되고 취미 있는 아이들이 발굴되어서 벤처창업가가 나오고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이게 가난하다고 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위원 : 저도 질문을 하면 4쪽에 보면 자유시민대학의 비전이 시민
력을 강화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시민력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라는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의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로 해서 개인적인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우리가 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할 때는 결국 민간영역이나 일
반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참여,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공동체의식은 좀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잘 안 들어와서 전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문해교육 관련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에서 보면 8억 정도를 서울교육청에 쥐서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억 정도를 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위 사회적 약자, 무학, 저학력 인구가 절대수로는 서울이 제일 많지요. 상대적으로 퍼센트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낮지만 절대수로 보면 역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일 큰 사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륜도 작을 뿐 아니라 이 돈의 쓰임새도 너무 학력위주로 가버린 것이 아닌가, 9억 예산 중에 8억 정도를 서울교육청에 쥐서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돌리게 하고 1억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학력인정을 하지 않는 많은 문해교육 프로그램들은 돈을 안 주고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꼭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전위원장님이 서울시가 왜 문해교육을 박대하느냐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민력 종합시민대학 하면서 거기에 35억까지 투입하면서,
- ○○○ 위원 : 네. 중산층이나 고학력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풍부 한데,
- ○○○ 위원 : 저도 2~3년 지켜봤는데 이 양반들이 학교를 굉장히 선호 하십니다.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같은 문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 오시는 것을 좋아 하고 이 양반들은 소풍 오고 수학여행 꼭 같이 가시려고 하고 졸업식 때 교복도 입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서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을 박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아니, 예산으로 보면 당연히 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해교육 영역은 특수한 영역입니다. 그동안 관에서 문해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학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주도의 인프라들이 실제로 주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약간 변화했지만, 그런 뿌리 깊은 40년, 50년 된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왜 학력인정 중심으로만 돈을 쓰느냐, 그것도 서울교육청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이 돈을 쓰고 있어서 저희 문해교육 쪽에서는 서울시가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전국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 ○○○ 위원 : 지금 하신 말씀하고 연관되고 ○○○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도 관련이 되는데 지난 번 회의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지난 번 회의에서 정체성 문제가 많이 거론됐다, 지금 그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은 나온 것 같고 집행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평생학습 정책의 이미지랄까 정체성, 브랜드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 이 정책의 주된 핵심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기존의 연속선상도 있고 구석구석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진행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진흥원을 통해서 이것들을 실현해나가신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해교육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대체로 서울시의 정책 모델이 전국적으로 뭐랄까 모범사례로 해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 특히 서울시의 실험과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상당히 잘 실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개발되는 것들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컨셉이 협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사회적 경제라든가 은퇴후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부작용을 염려하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 시도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협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평생학습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이 크다, 작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의미 있는 실험이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지난 번 회의결과를 반영하신 것 같은데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교육이라든지 은퇴후 교육이라든지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도 어떻게 민과 진흥원과 시청이 협력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에 큰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낸다기보다 그런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문해교육도 마찬가지로 학교밖에 흘러나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이 부분도 실험을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은퇴후 학습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너무 분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 안에서도 사업별로 너무 분할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개가 내려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랄까, 서울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귀농 귀촌 이런 부분보다 정거장처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농촌이나 산촌에 가서 산다는 이런 모델도 많이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사업들이 협력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관 주도로 가는 것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더디더라도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들을 저는 평생 학습 쪽에서도 실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시민대학의 기본 컨셉도 마을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쓰자는 말은 전혀 아니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진흥원 쪽에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마을과 운동과 결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위원 :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저도 갖고 있던 의문점이 해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평생교육 계획인데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상상하는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교육을 포괄하고 잘 연계하고 통합 조정하는 그런 그림이 없을까, 여기 진흥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은퇴자 하면 쉬프트 플러스 재단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흥원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진짜 서울시 기본계획이라면 진흥원 외에도 많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여기에 담기고 종합하는 맵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성평생교육시설만 해도 몇 십 개가 됩니다. 그게 통째로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모든 평생교육 관련기관들을 총괄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수평적으로 따로 있는 분할적 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 의장(평생교육국장) : 그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데 그러니까 평생교육 하면 평생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교정규 과정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평생교육입니다. 직업교육도 있고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여성발전센터나 플라자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이고 이것을 다 아울러야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금년에 본부 캠퍼스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맵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평생교육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지금 300개 강좌 1만 몇 천 명이면 우리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마치 서울의 평생교육의 다 인양 남들이 보면 그것밖에 안

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뮌헨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평생교육이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직업교육 포함해서 모든 것 다 망라할 것입니다. 강좌도 1만 2,000개가 된다니까 거기에 있는 뮌헨 시민대학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것까지 다 통 털어서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아마 서울도 작업을 해야 하고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보기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자유 시민대학이 오픈하면 그런 역할을 같이 논의해서 전체적인 엮는 작업만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 위원 :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보면 교육기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한테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패러다임인 것 같고, 위원님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학습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거나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을 협치도 그렇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서울에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서 사실 저는 약간 난감한 ‘아, 방송대는 할 일이 없구나,’ 나름대로 국민의 대학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했었는데 할 일이 없구나, 라는 난감함을 느끼면서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상상력과 관련해서 브라질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걸어 다니다 보면 빨간 등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등대는 어디든 딱 상징을 해줍니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단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걸어갈 만한 거리에 학습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서울시에서는 두 가지 축에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의 기관이든 이

미지든 교육모델이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시행해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습자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현장과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맵핑해 나가면서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보급해나가는 이런 두 축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전자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중의 하나가 기초대학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다문화 얘기도 나왔고 학교밖청소년 얘기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고등교육이 쉬울 것 같지만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문화여성들 같은 경우도 특히 외국에서 의외로 출신대학들이 있는 그리고 직업이 좋은 여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를 하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는 파출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의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대학은 들어갈 수 없다, 인정이 안된다, 비문해자들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고등교육의 장벽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누구나 학력과 무관하게 대학이라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여기를 거치면 어느 정도의 기초교양이 되어서 국민으로서의 의식도 가져나가고 대학에도 진입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관이 분명하게 존재해준다면 그러면 공부하다가 미혼모 굉장히 여러 계층의 학습자들이 학습기회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채널로써 자유시민대학이 됐든 자유기초대학이 됐던 이런 영역들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동적 고령화라고 하는 주제 이것이 예를 들면 50플러스 재단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면 고등교육 기회의 적극적인 부여라는 보편화라는 부분들을 실현해나가는 기관으로써 자유시민대학이 위치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잘 못하고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그것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 현재 반편견, 반차별 교육에서 방법론들이 실현이 되지 않

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다 나왔던 학습 소외집단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교육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여전히 교육자 중심의 설명식 교육이라는 방식으로 교육, 대학, 강의라는 방식으로 교육이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이라는 틀에서 자유시민대학을 본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결국은 반차별이나 반편견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습상담을 할 때도 생애주기를 고려한 학습설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새로운 접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관의 기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과 더불어서 전체 맵핑이 제시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연구랑 연결되어야 해서 서울시 여기에서 나온 것과는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된다면 뒤에 학습 매니저라든지 향후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있는 것과 연결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전체 맵핑과 연결되어서 얘기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위원 :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교육 분야별 내용에서 서울시민대학에서 다양성과 반차별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육 분야들이 개인을 함양시키는 이런 부분이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꼭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민대학을 학위과정하고 연계시키는 연결고리 저는 시민대학은 학위하고는 별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학위 명칭에서도 11페이지에 보면 저는 놀란 것이 우리가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호칭을 학사, 석사, 박사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것은 아니다 싶었어요. 우리가 학력주의가 너무 강한 나라이고 그 폐해 때문에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닫힌 면이 있는데 시민대학에서마저도 학사, 석사, 박사 개인의 허세욕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천지사방이 박사, 석사인데 시민대학까지 이런 칭호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아니어서요. 학위는 학위인 것이고 시민대학마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답변이 안나온 것이 진짜 우리가 자유시민대학이든 아니면 서울시평생학습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여기에서 시민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밑에 다뤄지는 내용들의 상당부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여가선용 그런 쪽으로 갔지 정말 시민력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는 의심이 듭니다.

○ ○○○ 위원 : 지금 진흥원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영역이 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자유시민대학으로 인문교양 종합시민대학입니다. 또 하나가 모두의 학교입니다. 특화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배울 학습을 계획하고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하는 진짜 시민대학이고요. 또 하나가 동네학교가 있습니다. 동네배움터 즉, 전통적인 평생교육 영역입니다. 그 안에 문해교육 세 가지 영역이 맞붙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에서 모든 평생 교육적 욕구를 다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민대학은 그야말로 일반시민들의 시민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인문교양대학이고 협치라든가 새로운 학습설계라든가 혁신모델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의 학교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동네학교에 적용시키고 확산하고 시민대학에도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전은경 선생님이 늘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해교육 영역은 동네학교, 마을학교 이런 개념으로 전통적인 영역의 이런 쪽으로 세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사업내용을 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보면, 다른 데는 없는 민주시민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종의 사회발전의 전체, 우리가 여기 토론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교육이기

를 공적인 접근을 할 때는 바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백화점 문화센터나 일반대학의 교육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일반적인 방향성이 더 있어서 정말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민력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람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부사업들이 이런 쪽으로 좀 더 몰려갔으면 좋겠다, 그게 서울시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아닌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다른 데에서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진짜로 동네 학교, 모두의 학교, 자유시민대학이 되면 다른 데는 다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 민간영역에서 하던 일들은 공적인 일로 다 환원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 의장(평생교육국장) : 저희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트워크 시민 대학처럼 자생적으로 하는 인문공동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 그래서 그들에게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 ○○○ 위원 : 예를 들면 아까 서울과 지방의 교차라든가 관과 민의 협치라든가 이런 게 모토는 항상 있는데 그게 구현되는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냐, 아까 제가 기초대학 얘기를 한 것도 모두다 그렇게 간다가 아니라 어렵기는 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중심으로 필요를 읽어내면 뭐냐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비어 있고,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한다고 할 때 서울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맨 앞에 목표에 ‘자율과 공동체적 실천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율과 공동체적 실천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가 원래 여기에서 지향하셨던 바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학습활동을 해나갈 때 자율이나 공동체적 실천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협치라든가 네트워킹이 들어가고 그럴 때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어떻게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목표와 연결되면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평생교육 기회확대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세대간의 제공이고 또 하나가 계층간에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물망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공적 영역이 확대되어 감으로 인해서 NGO들이나 자생적인 평생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죽는 것 이게 초창기에 광명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었고 최근에는 대전시가 시민대학을 크게 하는 바람에 결국 축소시키는 그런 현상까지 갔었는데 서울의 시민대학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특정영역이니까 인문학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해가면서 항상 병행해갈 때 이런 자생적인 조직을 진행해나가는 것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서울시교육청은 항상 제도권에 있는 학교 위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층, 초·중·등 중도탈락자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학습결과를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나온 시민학위제 이게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일본 홋카이도의 도민대학에서 도민학위제가 있고 삿포로 시에서 학위제를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학사100시간, 석사150시간, 박사200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지역민방을 통해서 대학교수나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원금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지역학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도 들어가 있고 인문학도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학사는 필수과목이고

그다음에 학사를 부여하더라도 대학의 학위 전공처럼 특정영역을 부여합니다. 미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왜 부여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분들을 활용할 때 그게 없으면 활용이 안됩니다. 이게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든지 강사로 활용하든지 그런데 이게 통 쳐놓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차이점은 관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엮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엮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을 다 엮습니다. 그것을 확대해가면 우리 평생교육법에 평생 계좌제를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평생교육 계좌제에 합격, 불합격시키는 제도로 되는데 원래 합격, 불합격 시키는 제도가 아니고 수준레벨을 정하는 것입니다. 7단계 정하면 5단계가 대학수준 레벨 5 이렇게 주고 크레딧이 몇 크레딧인지 묶여줘야만 이게 나중에 이 과정을 끝내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그 연결고리로 만들어 주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고 합격, 불합격으로 해주니까 기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시행을 안 한다면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필요하면 국장님도 일본에 갔다 오시는 것도 시작 전에 설계를 아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활용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 ○○○ 위원 :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공공재라는 것은 꼭 국가가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이 만드는 측면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돈을 지원하면 요새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운동력이나 자생력이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진흥원하고 시가 관심을 갖고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을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생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심이랄까 그것을 딱 감사 받고 복잡하게 결제 받고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영역을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시면 거기에서 실패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뭔가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시민사회에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이 갑자기 커지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정신을 못차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경로를 유지해가시되 그런 여지를 자꾸 열어주셔서 서울에서 그런 실험이 되더라, 그런 의미 있는 실험, 실패 사례들이 누적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나 이런 것이 문제라기보다 관심이 만나는 이런 장들이 얼마나 열릴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뭐랄까 아까 교육청 말씀도 하셨지만 굉장히 관료적으로 일이 분명한 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시평생학습 쪽이라면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흥원이라는 좋은 조직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을 저희 같으면 그런 것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 ○○○ 위원 : 이어지는 맥락에서 저는 계속 오늘 우리가 왜 모였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열린 2018 평생교육협의회는 사실 우발적인 협의체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된 조직이고 이 조직의 기본적인 목적은 광역단위 지자체가 어떻게 평생교육을 진행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목표인데 지금 여기에 보여주신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역별 연결협력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안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광역지자체가 기초단위 지자체와 그 하부단위 동네나 마을까지 이어지는 그 축에서 서울시가 추진 체제에 굉장히 핵심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초지자체의 평생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견인하거나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강

화할 때 사실은 서울평생교육진흥원이 임파워먼트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는 실행조직으로만 많이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기초지자체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평생교육이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게 예산을 꼭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예산도 쓰자는 입장인데 특히 마을이랑 구 단위 평생교육진흥 구 차원과 시차원에서 협력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매개가 됐을 때 이런 식의 연계, 협력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수직적인 포지션에서 어떻게 서울시평생교육이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서울시 행자위 서윤기의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 위원 : 자주 이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의회에서든 평생교육협의회 회의개최를 왜 안하느냐, 1년에 한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고 회의를 끝까지 지켜보신 적도 없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해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해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년에 한번, 5년에 한번인가 평생교육종합계획(안)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 종합계획(안)에서 해마다 종합계획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고 해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달성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회의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선 아닙니다. 여기 계신 협의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안이 머릿속에 안착되어 있어야지 전략과제 나오고 세부과제들 나오고 그 세부과제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고 하는 것들이 이번 연도에 중요하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대학 운영계획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뭐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좋은 얘기들만 다 썩어 있어요. 구체적이

도 않고 물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공무원들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그야말로 집행단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가면 다 훌륭하고 좋은데 사실상 이것 중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공무원의 성과기준으로 잣대로 보면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기준에서 보면 안됐다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을 치우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쁩니다. 바쁜데 이 자리에 굳이 참석한 이유가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회의하려고 한번 우리가 서울시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이라는 그 이름으로만 온 것은 아니잖아요. 수도서울의 평생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오셨잖아요. 여기에 왜 모두의 학교 담당하는 팀장이 안왔어요? 그리고 왜 시민대학 담당 팀장은 없어요? 그분들이 다 와서 이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 ○○○ 위원 : 그전에 3기 할 때는 시장님이 오셨고 부교육감님도 오셨는데 충분한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진지한 회의가 됐으면 합니다.
- ○○○ 위원 : 협의회가 1년에 한번밖에 안하는 이유는 그 협의회 산하의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안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고맙습니다. 저희 시장님과 부교육감 참석 했었

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많은 회의가 있거든요. 친환경 급식 관련된 것도 있고 청소년 관련된 것도 있고 교육정책도 있는데 회의를 하면 거의 안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일이 많을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안옵니다.

- ○○○ 위원 : 그런 이유가 서울시 일, 이것은 교육청 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 의장(평생교육국장) : 자기들로 봐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안타깝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그것 같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맵핑하는 것, 수직적으로 맵핑하는 것, 우리 평생교육을 매트릭스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년에 주어진 과제가 그것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고한 것은 평생교육국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하게 됐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의 전체적인 총괄역할을 평생교육협의회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5개년 계획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에 따라서 세부과제들 추진경과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서 그다음에 경과보고 그것을 우리 협의회 위원님들께 모두 다 드리고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올해 계획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진도에 맞춰서 2018년 의견을 서면으로 꼼꼼하게 받아주시고 아까 ○○○ 위원 말씀하셨듯이 계약제가 국가에서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국가가 못하면 서울시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인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견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책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이끌어 가실 분들이고,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네. 참고로 안내말씀을 드리면 저희 계획은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3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합니다. 서울 자유시민대학 2022 구복지재단 리모델링 다 되어 있고 인원선발 중에 있는데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3월 28일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그것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 위원 : 오픈식 할 때 서울시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서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십시오.
- 의장(평생교육국장) : 네, 오시겠다면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사전에 확인 해서 의사를 주시면, 왜냐하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최고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 ○○○ 위원 :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구가 그냥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그리고 의장이 시장인 경우는 저희 위원회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비록 시장님이 안오셨지만 위원회 위상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시간을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왜 협의회 회의를 잘 안 여느냐 하면 시장님이 의장님이신 회의라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부담을 많이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시장님 참석을 맞추려면 회의를 못 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시장님 불참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하여튼 오늘 ○○○ 위원님께서 거의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서요.
- ○○○ 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저는 교육자로 있었으니까 행정 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감사팀에서 감사반장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은 실적 위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적보다는 성과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목표치

에 얼마나 도달했느냐는 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효과에 얼마나 접근해 있느냐는 것은 실적보다는 성과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이 이것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는 것이 행정쪽에서는 실적이고 시민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효과가 어떤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우리도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평생교육국장) : 네. 행정에서 보면 성과를 가장 잘 대표하는 실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만족도나 시설개소수니 이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하는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나타내기가 행정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평생교육도 하게 되면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는 방향이지 이게 무슨 계획이냐, 저도 과에다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민 학위제 몇 명하겠다, 이게 과연 시민들에게 와 닿는 성과냐, 하여튼 참고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말씀이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 4기 평생교육협의회가 출범했고 오늘 제1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시면 다음 달에 서의원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 제1차 평생교육협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10시45분 회의종료】